

##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의 의미

통 일 연 구 원

Online Series CO 11-01

북한은 2011년 1월 1일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를 통해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자>라는 제목의 공동사설을 발표하였다. 금년 신년 공동사설의 핵심 단어는 ‘경공업’, ‘인민생활 향상’, 그리고 ‘강성대국건설’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이데올로기적 슬로건과 구호가 줄어들고 실용적 언어가 강조됨에 따라 힘이 약하고 수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분야별로 공동사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공동사설은 올해의 성격을 “인민생활대고조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의 해”로 규정하여 2012년을 준비하는 해로 설정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주민 노력동원이 예상된다. 내년 김일성 탄생 100돌(강성대국건설의 해)을 “최상최대의 명절”로 맞이하고 “김일성조선 100년사를 총화”하기 위한 “총진군, 총공세”를 선동하고 있다.

둘째, 정치적으로는 후계자 김정은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은 채 김정일 중심으로 서술하는 등 김정일의 통치권이 유지되고 있음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에 “특기할 정치적 대경사”로 “계속혁명의 근본담보가 마련”되었음을 강조함으로써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김정일·김경희를 동행하여 일선 생산현장을 빈번히 방문함으로써 ‘경공업 혁명’, 나아가 ‘경제강국 건설의 치적’을 권력세습 정당화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빠르면 김정일의

최고사령관 추대 20돌(2011.12.24)이 되는 연말쯤 김정은에게 원수칭호 부여와 함께 그를 최고사령관에 추대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2010년 12월 24일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19돌 경축연회에 김정은 및 군 고위간부들과 함께 김정일이 이례적으로 참석한 것은 그간 김정일의 ‘군 지휘 업적’을 찬양하고 군 지휘권을 점차 김정은에게 이양하기 위한 수순일 가능성이 있다.

셋째, 대남 부분의 기조는 작년과 거의 다름없는 것으로 평가되나 남북관계의 긴장 책임을 “남조선 보수당국”에 전가하면서 우리 사회에 “평화수호 투쟁”을 선동하는 한편 “북남 사이에 대화와 협력분 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내부문제에 집중하기 위한 대남 유연을 가장하였다.

넷째, 대외적으로는 작년에 김정일의 2차례 방중 의미를 “조선혁명의 유리한 환경 마련”으로 평가하고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에 맞설 것임을 주장하면서도 “비핵화 실현 입장”을 밝힘으로써 강은양면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작년과 달리 평화체제나 미·북 대화의 공세적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2011년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은 북한의 화전양면 모두 대비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북한의 정책방향은 선군정치와 국방력 강화 및 군사적 모험주의를 핵심으로 하여 후계자 김정은의 업적 쌓기에 나서면서, 후견정부의 안정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남 강경책으로 후견정부의 주류를 이루는 선군보위세력의 내부 결속력 강화 및 주민 통제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다. 특히, 북한정세의 불안정성과 대남 및 대외정책의 돌출성은 후계체제의 진행과 맞물려 감소하지 않고 있으므로 예상 밖의 대남 도발가능성에 대해서 지속 경계해야 할 것이다. 2010년에 나타난 북한의 도발 행태와 우리의 위기상황에서의 문제점 노정을 교훈 삼아, 북한 도발의 사전 억제 및 사후 위기관리 체제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작년과 같이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북한의 국정목표가 경공업생산 증대를 통한 ‘인민 생활의 결정적 전환’이고 후계체제 공고화도 절실한 바, 내부 정치·경제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대외적으로는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 동기가 증대된다. 대남관계 개선, 남북화해와 협력에 대한 긍정적 표현은 자립갱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제난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부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제재와 압박의 감소, 나아가 외부지원 기술과 재원의 확보가 요구된다.

따라서 올해 남북관계에서는 북한의 수세적 입장을 활용하여 우리가 남북대화를 주도하고 대북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전쟁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계기를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작년 남북 간의 긴장 악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남북대화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내부문제로 인한 남북대화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 경우 대북정책 추진의 핵심적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 달성과 군사적 도발의 원천적 봉쇄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명시적인 천명과 2010년도에 자행한 군사적 도발들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설치 약속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대북지원율

하더라도 이러한 원칙에 대한 합의와 이행 정도에 따르는 ‘비례성 및 상호주의’의 원칙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남북관계 진전과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공조의 틀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 국론분열과 2012년 정국(총선, 대선)을 겨냥한 위장 평화공세와 통일전선전략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치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대남 전략상 도발 후에는 반드시 대화국면을 조성하여 왔다. ‘각계층의 래왕과 접촉’ 등을 요구하고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강조하는 등 민족공조와 통일문제를 내세워 정치적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대남 분열 책동에 대응하여 국민 여론의 결집과 통일 국민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현 정부와 정파나 이념을 달리하는 세력들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대북 인식에 관한 한 광범위한 초당파적 컨센서스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대결구도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수천대 규모의 원심분리기를 갖춘 현대적 우리늄농축공장이 정상가동”임을 위협하면서 “비핵화 실현입장 불변”임을 표방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화입장을 밝히면서도 “대중 친선관계 발전” 및 “제국주의의 강권”에 맞대응을 주장하여 강온양면 전술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미·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이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갈등조장으로 외교적 실리를 추구하는 의도를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